

# 브레이크 없는 물가, 지난달 4.8% ↑ ... “당분간 상승 지속”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4%대 상승 금융위기 후 162개월 만에 최고치 대외적인 물가상승 요인 악화 우려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육박했다. 소비자 물가는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전기·가스 요금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오르며 전월(4.1%)에 이어 두 달째 4%대를 기록했다. 상승 폭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34.4%) 등 공



4월 소비자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한 3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뉴스시스

업제품 가격이 1년 전보다 7.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높다.

휘발유 28.5%, 경유 42.4%, 자동차

용 LPG 29.3%, 등유 55.4% 등이 모두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대비 6.8%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

으로 1.9% 상승했다. 수입 소고기(28.8%), 돼지고기(5.5%), 국산 쇠고기(3.4%) 등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가 4.5%, 공공서비스 0.7% 등으로 오르며 전년 대비 3.2% 상승했다. 특히, 외식이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세는 2.0% 전세 2.8%, 월세 1.0% 각각 올랐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생선과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1.0% 오르며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였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상 조건 악화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곡물가격이 오르고,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불안 요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겹쳤다”며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당분간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류세 30% 인하분 가격 반영과 주요 원자재·곡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공정위, 알뜰폰·車부품 ‘독과점 산업’ 관행 손 본다

독과점 폐해 여부 등 시장분석 IoT는 선제적으로 분석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등 2개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보고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신산업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도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산업을 선정해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시장집중도와 진입장벽, 해외경쟁압력 등 시장구조와 시장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알뜰폰과 자동차부품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이지만 2020년 기준 SK텔레콤, KT, LGU+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이 89.1%에 이른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과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전화선 가입자 점유율은 50.8%로 전년대비 8.4%포인트 상승해 과반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 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은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산업이다.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완성차와 철강, 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 2019년 기준 4163개 사업체, 23만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공정위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왔으며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해 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기업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 중소기업의 인종대체부품이 OEM부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물인터넷 분야는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신산업분야로 봤다.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분석한다.

또 사전통지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뿌리산업 특화단지’ 7개 지역 신규 지정

산업부, 아산테크노밸리 등 지정 강원·충남·대전 지역 첫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산 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울산 조선해양산업특화단지 등 12개 단지를 2022년 특화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뿌리산업진흥촉진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4개 단지를 시작으로 10개 이상 뿌리기업이 집적(또는 집적예정)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거제 육포 조선해양 특화단지 ▲거제 죽도 조선해양 특화단지 ▲강릉 뿌리산업 특화단지 ▲아산테크노밸리 특화단지 ▲부산 금형산업공동혁신 특화단지 ▲대전 평촌 차세대 융합 특화단지 ▲경기 백학동구 뿌리산업 단지 등 7곳이다.

이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기존 38개에서 45개로 늘었으며, 제도 도입 10년 만에 특화단지 수는 11배, 입주기업은

332개사에서 1790개사로 5배 증가했다. 올해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범위확대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차세대 공정 특화단지를 첫 지정했다. 이는 뿌리산업 범위를 기존 6대 공정기술에서 14대 공정기술로 확대한 뿌리산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8대 차세대 공정 중 적층제조(강릉), 정밀가공(대전) 분야 특화단지를 첫 지정했다.

또 도심형 특화단지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그간 뿌리기업은 교통·주거여건 등 제한 인프라가 불충분한 교외 지역에 주로 위치해 인력 확보 등 경영 애로가 있었다. 대전광역시시는 정밀가공·금형·

엔지니어링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일하기 좋은 우량 뿌리기업 25개를 평촌지구에 유치해 도심형 특화단지 성공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충남·대전 지역에 첫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올해 3개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도입 10년만에 전국적인 확산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해 울산방어진조선해양 특화단지 등 선도형 2개, 영암삼호 뿌리산업특화단지 등 일반형 10개 등 12개 단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총 1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에너지기술기업 매출 300조 육박 고용 45만명 달해

국내 에너지기술기업 수는 2만여개사이며, 매출은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내 최초로 에너지기술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국내 에너지기술기업 수는 총 2만314개(2020년 기준)로 추정되며, 에너지기술 분야별로는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이 전체의 52.3%로 가장 많고, ‘에너지효율’(29.0%), ‘화석연료’(7.3%) 순으로 많다.

에너지기술기업 매출액은 약 298조원, 종사자는 약 45만명으로 추정된다. 분야별 매출은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이 124조4000억원으로 41.7%를 차지하고, 이어 에너지효율(70조4000억원), 화석연료(38조3000억원), 재생에너지(31조2000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

에너지기술기업 종사자 중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이 20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효율(13만7000명), 융복합 기술·연구(3만7000명), 화석연료(2만3000명) 순이다.

에너지기술 R&D 투자액은 약 4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벤처기업 인증(벤처기업협회)을 받은 곳은 평균 15.4% 수준으로 융복합기술·연구, 핵분열 및 핵융합,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기술 분야 산업에 대해 조사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및 10년 후 산업 전망 지수는 2023년 114.0점, 2030년 117.0점으로 조사됐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세종=한용수 기자